

‘동아시아연구원-대화문화아카데미-동아시아평화회의’ 공동 학술토론회

미국 패권의 동아시아 평화

일 시 : 2020년 12월 16일 (수) 14:00 - 18:05

장 소 : 서머셋 팰리스 서울 세미나 A & B 룸

주최 :



대화문화아카데미

동아시아평화회의

후원 :



재단 여해와 함께
Kang Won Yong Foundation



서울특별시

경향신문
The Kyunghyang Shinmun

프로그램

14:00-14:20	개회사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환영사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축사	이흥구	동아시아평화회의 좌장
제 1세션 <미국 패권의 미래>			
14:20- 16:00	사회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발제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 교수
		차태서	성균관대학교 교수
16:00-16:20	Coffee Break		
제 2세션<동아시아 평화: 도전과 과제>			
16:20-18:00	사회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제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박재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영남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이동률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대 교수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00-18:05	폐회사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목 차

I. 약력 (가나다순)	- 1
개회인사	- 16
II. 제 1세션 <미국 패권의 미래>	- 17
미국패권의 미래 전망	- 18
미국 패권의 미래	- 33
III. 제 2세션 <동아시아 평화: 도전과 과제>	- 39
동아시아 평화:도전과 과제 -- 2020, 그리고 이후	- 40
동아시아 안보질서 안정을 위한 다자안보 협력 추동: 도전과 과제	- 47
‘미래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을까?	- 56



I.약력(가나다순)

형림준적건열
준명영재정동
김박박박서
손이이이이
이이이이이
전조차하영
성남서선



김 준 형
국립외교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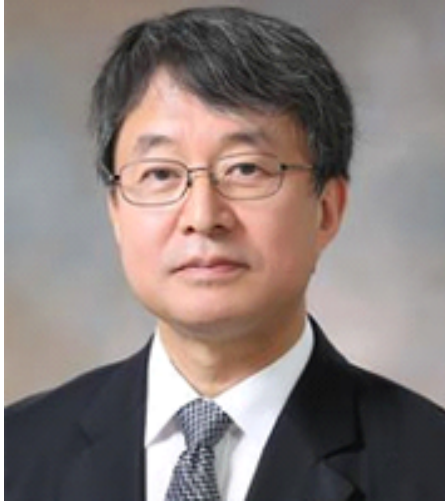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 및 외교연구센터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자문위원, 외교부혁신 외부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국립외교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명 림
연세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이자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 소장으로 있다.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초빙교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 교수, 하버드-옌칭 연구소 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전공분야는 한국 정치와 정치이론, 동아시아 국제 관계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에는 <한국 전쟁의 발발과 기원 1,2>(1996), <한국 1950: 전쟁과 평화>(2002), <역사와 지식과 사회>(2011)가 있다.



박 영 준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 과정을 수료, 동경대학교 총합문화연구과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평화학회 회장, 현대일본학회 회장, 미국 하버드대 방문학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역임했으며, <중앙선데이>,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에 칼럼을 게재했다.

주요 저서로는 <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2020), <한국 국가안보전략의 전개와 과제>(2017, 공저), <해군의 탄생과 근대일본>(2014),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2011, 공저), 등이 있다.



박 재 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전공분야는 인·태지역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 지역안보질서, 소다자 안보협력, 미국-호주 동맹, 호주 안보 정책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The Quad's Search for Non-Military Roles and China's Strategic Response: Minilateralism,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Regional Balancing> (2021), <Asymmetrical security dilemma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 reflection and implications> (2020), <Security Hedging Strategies of US allies and Partners in the era of Trump: the ROK, Japan and Singapore as Case Studies> (2020), <To double down or decouple? North Korea and China as challenges to the U.S.-South Korea alliance> (2020).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상황인지' 현황과 '쿼드(Quad)'국가의 기여: 쟁점 및 전망> (2020) 등이 있다.



서 정 건 경희대학교 교수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미국정치연구회장, <사회과학연구> 편집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세종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한국정당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정치학과 조교수, 우드로우 윌슨 센터 풀브라이트 펠로우,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한국학세계대회 집행위원장, 한국폴브라이트동문회 상임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외교정책 연구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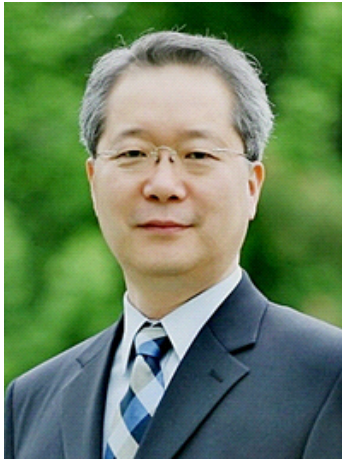
최근 저서와 논문으로는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2020), <미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2019,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Build Coalitions and Making US Policy toward China>(2019), <미국의 대한반도 국가 이익과 정책>(2019), <미국 국내 정치와 북한 비핵화 이슈: 합의(agreements)에서 이행(commitments)으로>(2018), <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외교정책>(2017,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등이 있다.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대학교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아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외교부 자체평가위원이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이다.

최근 저서로는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2020)>,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019), 32, 6,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이 동 루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중국 한국현대중국학회 회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한번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2019),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2019),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2017), <중국의 해양 영유권 분쟁에 대한 전략과 요인>(2015), <Deciphering China's Security Intentions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South Korea>(2016), <중국의 영토분쟁>(2008) 등이 있다.



이 삼 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정치학 전공으로 사회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2년부터 송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사회철학, 역사철학 등을 강의했으며, 철학연구회장을 역임했다.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APCEIU)의 초대 원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의 17대 사무총장직을 맡아, 평화, 인권, 지속 가능 발전의 교육, 문화 사업을 국제협력을 통해 추진했다. 크리스찬아카데미, 민주사회건설협의회, 기독교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에코피스 아시아, 역사 NGO 포럼, 기독교사회발전협회 등의 여러 책임을 맡아, 민주화와 정의, 평화, 통일을 위한 종교인, 지식인의 현실참여와 시민사회운동에 기여했다. 현재는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1991), 『기독교와 사회 이념』 (1986), 『하버마스의 사상』 (공저)(1996), 『아펠 철학의 쟁점』 (공저)(1998), 『현실개조를 향한 사회철학의 모색』 (2017),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기독교의 사명: 평화체제를 향하여』 (2019), 『정의로운 사회를 향하여: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2020) 등이 있다.



이 재 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다. 외교부 자문위원이며 대통령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학사, 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고, 호주 Murdoch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이후, 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2012년까지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서 객원교수를 지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아 정치, 아세안,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이며, 비전통 안보와 인간 안보, 오세아니아와 서남아 지역에 대한 분야로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최근 주요 연구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인도-퍼시픽, 새로운 전략적 공간의 등장(2015), 남중국해에서 공세적 중국의 실패(2016), 북한과 동남아시아(2017),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2018),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남방정책의 역할(2018),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공통분모와 신남방정책(2019), 비정형성과 비공식성의 아세안 의사결정(2019), G-Zero 시대 글로벌, 지역 질서와 중견국(2020)



이 혜 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연구분야는 미국 패권, 국제관계이론, 동아시아 안보이고 최근 저작으로는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의 재조명: ‘114일의 한미 분규’”(2020), “단극의 환상과 현실: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진화”(2020), “근대 국제질서의 탄생: 19세기 지구적 변환론”(공저, 2019), 『냉전 이후 미국 패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의 변주』 (2017) 등이 있다.

노르웨이 노벨연구소 초빙연구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몬타나 대학교의 The Mansfield Center 방문 학자를 역임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청와대 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이다.



전 재 성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 자문위원,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서울: 한울, 2020),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현실주의>(서울: 한길사, 2012),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등이 있다. 편저로는 <동아시아 지역질서 이론: 불완전 주권과 지역갈등>(서울: 사회평론, 2018), <복잡성과 복합성의 국제정치>(서울: 사회평론, 2017),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서울: 늘봄플러스, 2015) 등이 있다.



조 영 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베이징 대학교 현대중국 연구센터의 방문 교수, 난카이 대학교 정치학과 방문 학자, 하버드-옌칭 연구소의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9), <개혁과 개방>(2016), <파벌과 투쟁>(2016), <텐안먼 사건>(2016), <용과 춤을 추자>(2012), <중국의 법치와 정치 개혁>(2012), <중국의 법원 개혁>(2012), <중국의 민주주의>(2011) 등이 있다.



차 태 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존스 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직중이다. 중앙대학교 국익연구소 전임연구원,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전임강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 분야는 미국외교정책,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Whiter North Korea? Competing historical analogies and the lessons of the Soviet Case>(2020), <Is anybody still a globalist? Rereading the Trajectory of US grand strategy and the end of the transnational moment>(2020), <아메리카 합중국과 동아시아 지역 아키텍처의 변환: 네트워크 국가론의 시각>(2020), <한국의 중견국 외교와 정체성 공진화의 정치: 신동방정책과의 비교와 시사점>(2019) 등이 있다.



하 영 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미국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미국 프린스턴 대학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한국 측 공동위원장,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EAI 이사장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서 및 편저에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 <사행의 국제정치: 16-19세기 조선•연행록 분석> 등이 있으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하영선 칼럼”을 7년동안 연재했다.

개회인사

미국 패권의 미래와 동아시아 평화

지금 전 세계가 내년 1월 20일 이후 모습을 드러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정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처에 실패한 미국의 체면과 경제 의료 위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도 관심거리지만 G-2 시대의 세계무대에서 펼쳐질 중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며, 어떤 폭풍을 가져와 피해를 입을까 손익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며 최대의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최우선의 외교적,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대중, 대북 정책에 최대의 관심과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의 경제 각료와 국방 각료의 임명과 선택이 매패나 비둘기파냐를 물으며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냉전체제의 해소와 세계화의 돌풍 속에서도 대결과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한반도가 이제 신냉전의 위험 신호가 울리는 동아시아의 격전지에서 어떻게 건디며 살아남을 수 있겠는지 염려하면서, 또한 어떻게 위기를 기회를 만들지 고심하면서, 냉철한 분석과 슬기로운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주제의 세미나와 워크숍들이 열리고 있는 것은 모두 올바른 분석과 현명한 정책이 아쉽고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 시간의 담론마당에서 정책 대안까지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보다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사태의 분석과 이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위치와 시대적 상황을 적확하게 파악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희 대화문화아카데미와 동아시아평화회의가 오랜 전통과 많은 연구 업적이 있는 동아시아연구원과 함께 오늘의 담론마당을 열게 된 것은 시민사회와 학술연구소의 연계와 협업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귀중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여러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거리두기로 인해 자택과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참여하실 동아시아평화회의와 대화문화아카데미 여러 회원님들께도 감사한 마음과 함께 따뜻한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이 작은 마당이 어려운 시대를 건디고 극복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각오와 용기를 주는 담론마당이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인사를 드립니다.

2020. 12. 16.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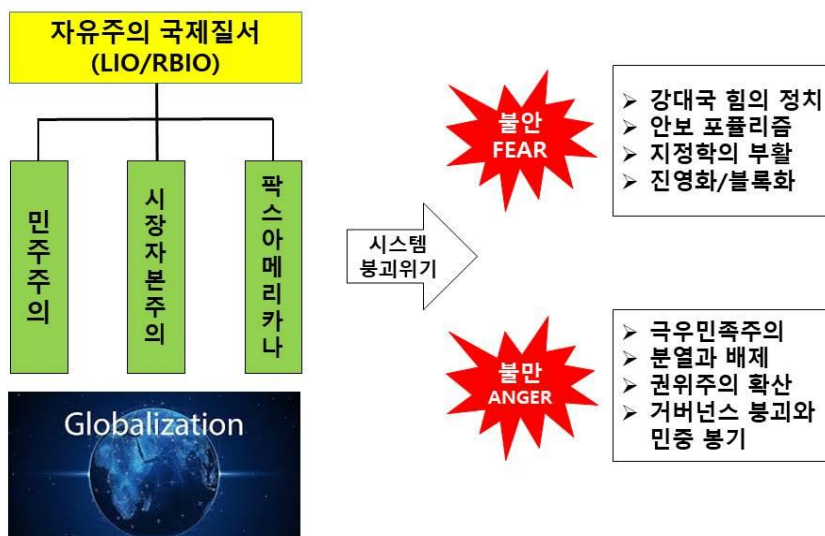
II. 제 1세션 <미국 패권의 미래>

미국 패권의 미래전망

김준형(국립외교원)



대 격변의 시대, 시스템의 붕괴 위기



민주주의 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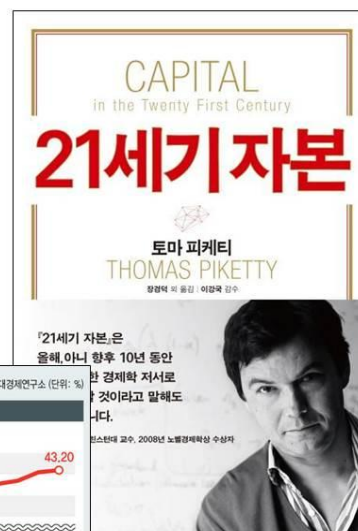


<https://www.democraticunderground.com/100212933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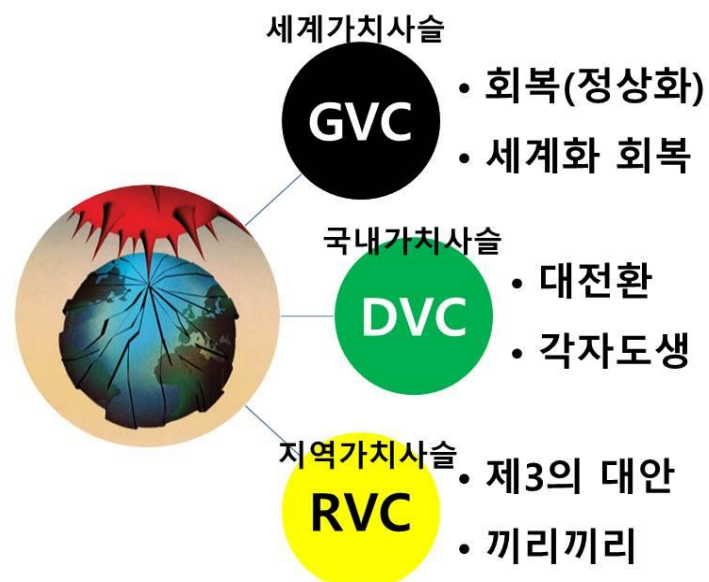
최원석, "세계정치, 스트롱맨 전성 시대," 프리미엄 조선, 2016.6.2

불평등(ine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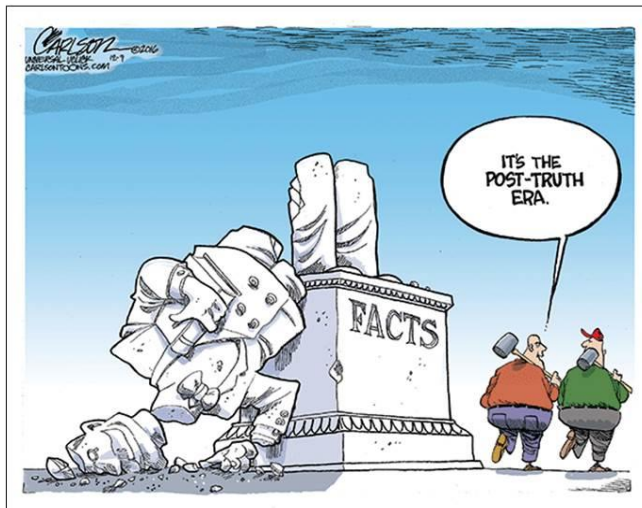




팍스아메리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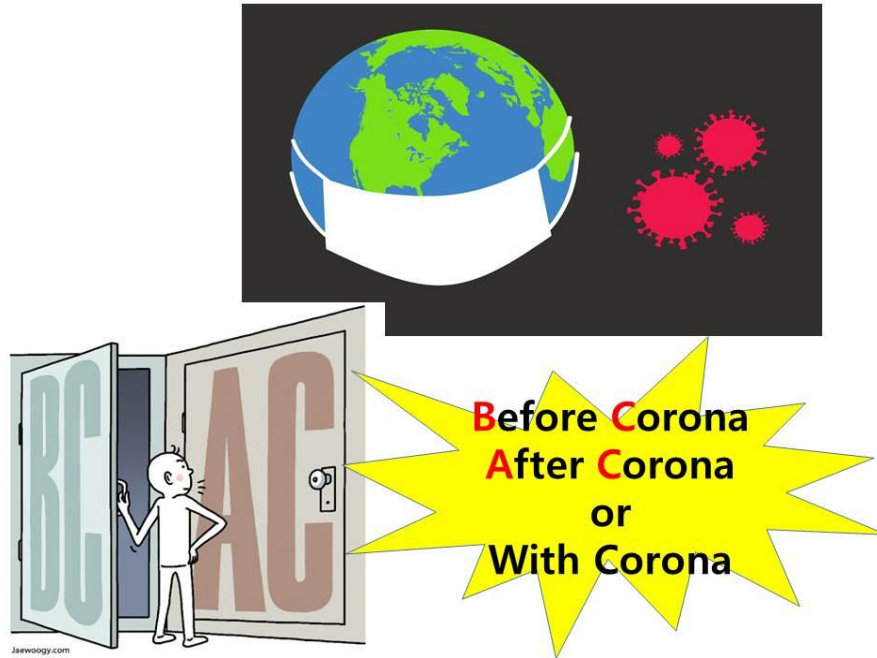
국제기구-국제협력-다자주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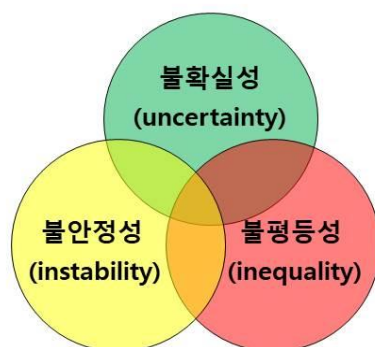
탈진실의 시대

진실보다 입장
사실보다 의견
Fake than Fact





• e w • o r m a l



- ✓ 비정상상태의 장기화
- ✓ 혼재와 혼란
- ✓ 감성의 정치
- ✓ 분노의 집단화
- ✓ 혐오와 피해의 낙수효과

신지정학

- 핵무기 발전, 사이버스페이스, 정보기술 등은 곧 지정학의 소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정학 중요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무효화할 수는 없다.
- 뉴노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 하이브리드 지정학: 21세기는 전통적인 지정학의 귀환인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정학의 실체가 대두(사이버스페이스), 실제 국경과 가상의 국경
- 탈냉전 이후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러시아는 푸틴의 민족주의와 함께 미국의 고립주의로의 회귀에 의한 공백을 기회 삼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 동북아는 미중 전략경쟁으로 지정학의 귀환,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우며, 예측성이 떨어지는 국제 및 지역구도 형성

신안보

- ✓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테러
- ✓ 자연환경: 기후변화, 미세먼지, 식량, 에너지, 보건
- ✓ 인간경제: 자연재해, 이주와 난민, 경제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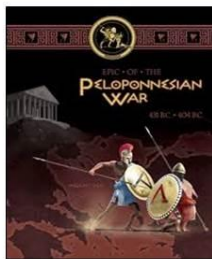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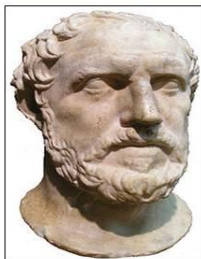
[미·중 전략 경쟁: 신냉전 vs. 탈동조화]



동아시아의 미·중 갈등: 4개의 발화점과 단층선



Thucydides Trap & Power Shi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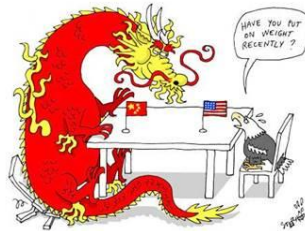
- Peloponnesian War: "It was the rise of Athenian Power and fear it inspired in Sparta that constituted the true cause of the Peloponnesian War."
- Graham Allison & Joseph Nye: Thucydides Trap; 1500년 이후 11 out of 15 cases (12 out of 16)
- 19세기 영국 vs. 독일, 21세기 미국 vs. 중국
- 기계적 적용을 비판하는 논지
 - 1) 세력전이가 모두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2) 당시 아테네 전쟁돌입과 패전은 국내적 요인(외교실패, 부패..)이 더 컸음

	Period		Ruling Power	Rising Power		Result
1	First half of 16th century		France	Habsburgs		War
2	16th–17th centuries		Habsburgs	Ottoman Empire		War
3	17th century		Habsburgs	Sweden		War
4	17th century		Dutch Republic	England		War
5	Late 17th–early 18th centuries		France	Great Britain		War
6	Late 18th–early 19th centuries		United Kingdom	France		War
7	Mid-19th century		United Kingdom, France	Russia		War
8	19th century		France	Germany		War
9	Late 19th–early 20th centuries		Russia, China	Japan		War
10	Early 20th centur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No war
11	Early 20th century		Russia, U.K., France	Germany		War
12	Mid-20th century		Soviet Union, U.K. France	Germany		War
13	Mid-20th century		United States	Japan		War
14	1970s–1980s		Soviet Union	Japan		No war
15	1940s–1980s		United States	Soviet Union		No war
16	1990s–present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No war

충돌 가능성 상승의 3조건



The “zone of contention and probable war”: 패권국과 도전국의 국력의 비율이 4.5~6.5 사이에 이를 때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커짐 (Tammen et. al. 2000)



Kinderberger Trap

- Charles Kindleberger: 유럽부흥계획인 마샬플랜의 기안자; 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학자인데, 조셉 나이아가 그의 이론을 원용해서 킨들버거 함정 가설
- 1930년대 대공황과 뒤를 이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영국의 패권 하락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최강의 패권 능력을 가진 미국이 고립주의를 선택함으로써 공공재를 공급해야 할 패권 부재 상황이 전쟁위기로 흘렀다고 진단
- 선한패권(benign hegemony)에 의한 공공재 공급이 국제질서 안정에 직결됨
- 국제정치에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의 부재할 때 국가 간의 신뢰가 낮아져서 강대국들이 각자 도생 확률이 높아짐



미국 패권위기 3종 세트

1) 과도한 군사주의

- 세계 군사비의 총합=미국의 군사비
- 주요 미군기지만 700여 개 & 30만 주둔(40여 개국)
- 거대한 군사네트워크 (Reagan행정부이후 급속도로 심화)
- 군산복합체의 공고화 현상
- 군사주의의 환상: Andrew J. Bacevich가 비판적으로 제기하는 'Washington Rules'은 미국만이 세계질서를 규정하고 운영하는 특권과 책임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평화보다 전쟁이 더 고결하게 여겨지는 비극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 이라크전쟁 당시 보급품 가격: 콜라 1박스(\$400) 백열전구(\$511), 양변기자리(\$640), 커피메이커(\$7600)



미국 패권위기 3종 세트

2) 카지노 자본주의

- 세계화로 인한 유기적 연결: 한번 무너지면 모두가 다치는 구조; ('대박' vs. '썩박'의 경제)
- "대량금융파괴무기"-Warren Buffett
- 뺑뚱기 경제: 골드만 삭스는 \$400억의 자기자본으로 \$1조1000억까지, 메릴 린치는 \$300억으로 \$1조
- 패권의 과잉팽창이 미국경제에 지우는 부담; 천문학적 재정적자(정부폐쇄)
- 현재의 경제위기는 약 10년마다 오는 산업경기순환에다가, 시장만능주의라는 30년짜리 지배 이데올로기의 위기(30년 전=케인스주의 위기)에다 100년 만에 오는 패권국가의 위기가 겹쳤다.



미국 패권위기 3종 세트

(3) 미국식 예외주의와 근본주의

- 대외정책과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
- 네오콘: 아프간/이라크 전쟁을 십자군 전쟁으로 여김
 - Bush's holy warrior, 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Intelligence, **General William Boykin** under Rumsfeld: "이라크전은 기독교와 사탄의 전쟁이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부시를 대통령으로 앉힌 것이다."
- 과거에는 희망, 낙관주의, 자유 같은 가치관을 전파했지만, 9.11 이후에는 공포나 분노, 그리고 폭력 전파
- 예외주의의 자기모순: 인구대비 투옥률 세계1위; OECD 30개국 중 에 빈곤률 멕시코나 터키 수준인 13.2%, 삶의 질 13위, 예상수명 평균 이하, 국민개보험 미비

미국 침체론의 신화와 반론

- The Myth of America's Decline(Josef Joffe, 2013): 정치가들의 단골메뉴-소련(1950s), 베트남전(1970S), Rising Sun(1990S), **Rising China(NOW)**
- Soft Power 압도적: world Ph. D. factory, R & D spending.....
- High birthrate & immigration
- The U.S. remains the top global competitor, thanks to its entrepreneurship and superior higher education.
- **Today's trajectory is not tomorrow's destiny**
- Shale Gas Revolution

조지 프리드먼 <The Next Decade> (2011)

- 21세기는 Deep Power를 지닌 미국의 시대
- 9.11 이후 미국이 대테러전쟁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전략적 균형을 상실했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컴백과 중국의 도전을 허용
- 2008년 금융위기는 결정타였으나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부활 예측
- 유럽연합은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고, 중국은 경제성장 정체 불가피

중국 외교담론의 변화

장쩌민 (93~02)	후진타오 (03~12)	시진핑 1기 (13~17)	시진핑 2기 (18~22)	
책임대국론 (1997)	평화발전론 (2004) 조화세계론 (2005)	신형대국관 계(2012) 아시아운명 공동체(13)	신형국제관 계(2017) 인류 운명 공동체(17)	
아시아금융위기 (1997): 위안화 평가절하 유보와 금융지원 노력	9.11 테러와 금융 위기: 미국 테러 전쟁과 힘의 공 백 전략적 활용	PIVOT TO ASIA, 재균형전략(2011) 2013년정상회담 과 중국의 제안	트럼프즘 본격적 전략경쟁	
클린턴 (93~00)	부시 (01~08)	오바마 (09~16)	트럼프 (17~20)	바이든 (21~24)

중국 기술 굴기



자체 개발 스텔스 JEN 31
시험비행 (2017.1)



태호지광 중국산 슈퍼컴퓨터
세계랭킹 1위 등극(2017.11)

중국 베이더우와 미국 GPS 비교

베이더우	중국 국가항천국	운용	미국 GPS
2000년	첫 위성 발사	1978년	
35개	가동 위성	31개	
일반용 5~10m, 군사용 10cm	위치 오차	일반용 5m, 군사용 30cm	

중국의 독립적 GPS인 BDS 구축 완료 (2019.12)



대륙간(중국-오스트리아)
양자위성통신 성공(2018.1)



자체항공모함 산둥함
시험 항해(2018.5)

Splinternet



플랫폼의 특징	인터넷	스플린터넷
기술표준	공개된 기준 (WWW)	플랫폼 제공사(애플, 페이스북 등)
스크린 포맷	PC 스크린	다양한 크기 스크린
상호작동 애플리케이션	플래시나 자바 등	정확히 해당하는 플랫폼 키트
허용 애플리케이션	어떤 앱도 가능	플랫폼이 허용하는 앱만 가능
검색가능범위	모든 사이트	허용한 사이트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최초 인터넷 구
상(ARPANET): 핵전쟁에도 버틸
수 있는 분산 네트워크



유럽 입
자물리
연구소:
최초의
웹사이
트



- 1980년 미국과 일본의 해저케이블 설치 시작 -> 현
재 380개 해저케이블 설치
- 화웨이: 이중 90개의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여,
특히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에 주력



Joe Biden의 미국



Healer in Chief
Can he Recover America?

Biden이 이끄는 미국



**BIDEN NEXT
US PRES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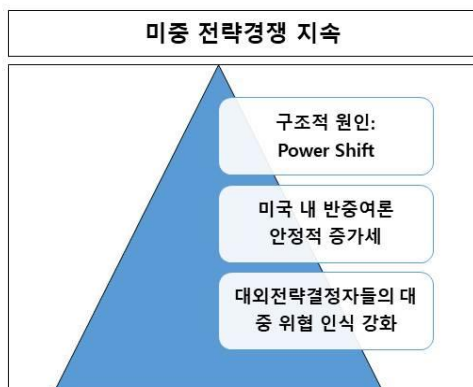
**WHAT ARE THE
GLOBAL
IMPLICATIONS?**

Inflection Point

Transitional Presidency



- America Must Lead Again
Multilateralism (ILO)
- Build Back Better
- No Protection Rackets-Friends
- Play by the Rule



- 미국정부의 대중 강경책은 초당파적 노선: 톤은 어느 정도 부드러워질 것이고, 양자적 마찰보다는 동맹국 진영 강화를 통한 국제연대 노선 구축 및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중 압박에 나설 가능성
- 미국이 이끄는 동맹 및 파트너 연대를 통한 대중 공세
- 강경책 예고된 분야: 남중국해, 영토분쟁, 홍콩-신장위구르 인권, 사이버 안보 문제, 기술패권
- 트럼프의 관세전쟁보다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시정 압박: 관세제재는 보조적 수단으로 내리고, 다자주의를 통한 중국의 구조적 문제 개혁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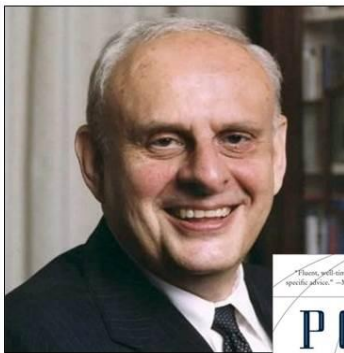
VEGETIUS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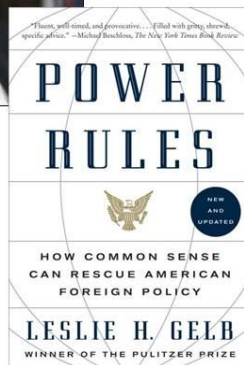


Henry Kissenger

- 전쟁의 논리는 힘이며, 힘이란 본질적으로 한계가 없다. 평화의 논리는 비례이며, 비례란 곧 제한을 의미한다.
- 전쟁의 성공은 승리이며, 평화의 성공은 안정이다. 승리의 조건은 전념이고 안정의 조건은 자제다. 평화는 강압과 굴복이 아니라 자제와 타협의 산물이다



Leslie Gelb



- 한국에도 정통한 미국 외교 최고의 전문가: 풀리처 수상한 NYT 민원기자, 국무부와 국방성 근무.
- 미국 외교 협회(CFR) 명예회장
- 21세기 군주론 『권력의 탄생』: 미국외교정책의 신랄한 반성을 요구하면서, 차기 대통령에게 미국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제안
- 군사력이 권력의 모든 것을 차지하던 마키아벨리의 시기는 끝났으며, 오늘날의 권력은 “경제력과 외교력으로 포장한 칼(군사력)”이며 세계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고 권력 행사의 올바른 법칙을 따라 상식이 통하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권고
- 외교 정책은 상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도를 넘은 원칙들(extravagant principles),’ ‘비열한 정치(nasty politics),’ 그리고 ‘권력의 오만함(arrogance of power)’이라는 ‘3가지 악마(demons)’는 미국의 외교를 방해했고, 오늘날 미국을 위기로 빠뜨렸다.
- 미국이 희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마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 방법은 상식으로 무장 강조

미국 패권의 미래

이혜정(중앙대학교)

1. 무엇이 문제인가?

○ 주어진 질문들

- 2020년을 바라보는 향후 10년, 미국 패권적 지위를 어떻게 전망하나
- 물리적 능력의 상대적 쇠퇴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트럼프 4년 훼손된 미국의 리더십은 회복될 수 있나
- 회복의 조건은 무엇이고, 어떤 도전 요인이 자리하고 있는가
- 바이든 정권은 어느 정도 추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 한국에 가져다주는 도전과 기회는 무엇인가

○ 위 질문들은 올바른가? 그 순서는 맞는 것인가?

- 서정건: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이다. 우리의 국익이 최고 관심사여야 한다. 미국은 다양한 독립변수 중 하나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¹
- 엘리슨 등이 정리하는 외교정책의 기본: "Foreign policy requires maintaining a balance among four classic variables. Ends are what an administration is trying to protect and advance. Ways are the strategies, policies, concepts, and methods employed to achieve those ends. Means are the elements of national power, acquired through taxing or borrowing, that enable the ways. And all three variables operate on the landscape of global security,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in which other actors pursue their own interests."²
- 한국과 미국 패권의 관계는?: Dean Acheson - "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8군 사령관 -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 (2017.7.8.)

○ 미국 패권의 미래 예측: 국제정치학자의 '산업재해'?

- 미래 예측의 본연적 한계와 미국 쇠퇴론의 부침

¹ 서정건, "혼돈의 미국 대선, 미국 민주주의는 쇠퇴하는가," 『창작과 비평』 190호(2020년 겨울), 267.

² James A. Winnefeld, Michael J. Morell, and graham Allison, "Why American Strategy Fails: Edning the Chronic Imbalance Between Ends and Means," Foreign Affairs (October 28, 202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10-28/why-american-strategy-fails>

1) 피할 수 없다 - Nye(2002)

- "The apocrypha of Yogi Berra warns us not to make predictions, particularly about the future. Yet we have no choice. We walk around with pictures of the future in our heads as a necessary condition of planning our actions. At the national level, we need such pictures to guide policy and tell us how to use our unprecedented power."³

2) 하지 말라 - Keohane (2012)

- 미국 패권의 쇠퇴에 관한 찬반 논쟁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당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고, 미국 패권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들은 알 수 없다
- 알 수 없는 변수들(unknowns): 강대국의 미래, 특히 중국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Will the major power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most importantly China, maintain their social and political coherence and avoid civil war)? 2008년 금융위기가 노정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교정될 수 있는지? 이념적으로 추동되는 체제가 불러올,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가능성과 같은 위험은 무엇인지? 지구적 민주화의 진전은 지속될 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미국 패권에 대한 국내정치적 지지는 유지될 것인지(And perhaps most important for the issues discussed here, can the United States as a society summon the political coherence and willpower to devise and implement a sustainable leadership strate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⁴

3) 잘못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문제다 – Colgan and Keohane(2017)

-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병폐가 확인된 대침체가 트럼프 부상의 구조적 원인이며 현 미중 경쟁의 기원이기도 하다. 콜칸과 케헤인은 2016년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한 도전은 국가 간 관계라기보다는 국내적인 것이라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대침체에 따른 미국체제의 사회적 계약의 붕괴가 미국 패권의 근본적 위기이며, 이는 자신들을 포함하는 패권 엘리트 전체의 책임이라고 반성한다."⁵
- "Those of us who have not only analyzed globalization and the liberal order but also celebrated them share some responsibility for the rise of populism. We did not pay enough attention as capitalism hijacked globalization. Economic elites designe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 serve their own interests and to create firmer links between themselves and governments. Ordinary people were left out. The time has come to acknowledge this reality and push for policies that can save the liberal order before it is too late."⁶

³ Joseph S. Nye, Jr., "Limits of American Powe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7-4 (2002-2203), 547-548.

⁴ Robert O. Keohane, "Hegemony and After: Knowns and Unknowns in the Debate Over Decline," *Foreign Affairs* 91-4(2012), 118.

⁵ 이혜정, "대침체, 미중 경쟁과 한국외교," 이관세 외 『미중 전략적 경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2020), p. 259.

⁶ Jeff D. Colgan and Robert O. Keohane, "The Liberal Order Is Rigged: Fix It Now or Watch It Wither," *Foreign Affairs* 96-3(2017), 37

4) (트럼프가 2024년에 재집권할 수도 있는) 미국 민주주의를 믿을 수 있는가? - Nye(2020)

- 트럼프의 문제는 국익의 정의 자체: 글로벌리즘으로 대변되는 패권 vs. 미국 우선주의
- 바이든의 품격이 트럼프 시절 미국 연성권력의 훼손을 일정부분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민주주의;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실패 하지만 트럼프의 대선 불복과 미국의 정치적 분열
- "But Biden will still face a deeper trust problem. Many allies are asking what is happening to American democracy. How can a country that produced as strange a political leader as Trump in 2016 be trusted not to produce another in 2024 or 2028? Is American democracy in decline, making the country untrustworthy?"
- "But Americans, including Biden, will still face allies' concerns about whether they can be trusted not to elect another Trump in 2024 or 2028. They note the polariza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Trump's refusal to accept his defeat, and the refusal of congressional Republican leaders to condemn his behavior or even explicitly recognize Biden's victory."⁷

○ 바이든 vs. 트럼프: 미국(패권과 체제)의 위기⁸

- 트럼프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위기의 산물이자 그 촉진자였다.⁹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적 민족주의와 일방주의의 결합으로, 이는 냉전의 종언 이후 미국의 패권 엘리트들이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지구화로 인한 자동차산업 등 전통적 제조업의 쇠퇴, 중산층의 붕괴와 경제적 양극화가 배태한 것이었다. 백인 인구의 감소 추세와 이민의 증가, 그리고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에 대한 인종주의적 반감이 증폭시킨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는 배외주의와 백인 민족주의가 결합된 '백인 우선주의'로 발전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출생지를 문제 삼으며 유명인에서 정치인으로 발돋움했고 경선과정에서 국경 장벽 건설과 반-이민/난민 정책으로 주류의 비판과 저학력 백인노동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기성 정치질서의 기능 부전과 정치적 양극화는 기존체제 전반이 왜곡(rigged)되었으며 잊힌 민중을 대변하여 체제를 개혁할 인물은 자신뿐이라고 주장하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로서 '트럼프 우선주의'의 토대였다.
- 이번 대선은 실제로 트럼프에 대한 찬반 투표였고, 그 결과는 미국의 주류와 민주당이 고대했던 트럼프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극단적인 분열이었다.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자유무역협정과 동맹, 다자주의를 비판하고 파괴하였으며,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대한 관용적 태도와 인종적 정의를 주장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백인 우선주의'로 미국사회의 정체성의 위기를 심화시켰고, '트럼프 우선주의'로 공화당을 사당화하고 대통령직을 사유화하여 사적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대외정책을 활용했다는 중

⁷ Joseph S. Nye, Jr., "Can Joe Biden's America Be Trusted?" Project Syndicate (Dec 4, 2020).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can-joe-biden-restore-trust-in-america-by-joseph-s-nye-2020-12>

⁸ 아래는 이해정, "미국 패권의 회복은 성공할 것인가," 『통일시대』 (2020년 12월호), 10-11를 그대로 가져왔다.

⁹ 이해정, 『냉전 이후 미국 패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의 변주』 (한울아카데미, 2017), 제7장.

차대한 이유로 제기된 탄핵마저 가볍게 제압하고는 결국은 대선불복으로 선거에 의한 정권의 평화적 이양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마비시켰다. 민주, 공화 양당이 최대로 지지층을 동원하는 데 성공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오히려 비백인유권자들 사이에서의 지지를 늘렸고 공화당은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하원에서 의석을 늘렸고 주 정부 선거에서도 기존의 우위를 지켜냈다. 민의의 분명한 위임도 정치권력의 재편도 없는 것이다. 퇴임 이후에도 트럼프는 계속 공화당을 지배할 전망이고, 트럼프 반대로 뭉쳤던 민주당의 중도와 진보는 불화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경제, 인종, 기후변화는 모두 민주, 공화 양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쟁점들로서, 바이든이 소환하고 있는 미국의 통합과 영혼의 회복 등 오바마 시절의 아름다운 수사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이 미국(인)의 이익이자 동시에 동맹과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는 '이익조화'의 원칙 혹은 '신화'를 깨뜨려버렸다.¹⁰ 트럼프 비판의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동맹, 다자주의의 회복을 주창하는 것과 이들 목표를 실제 실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트럼프의 도전에 직면하여 미국의 주류 패권 엘리트들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병폐를 일정하게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반성과 함께 소련의 위협을 대체할 새로운 패권의 정당화 논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도출했다. 전자에 대한 해법이 중산층의 이익에 대한 고려라면, 후자에 대한 해법은 중국 위협론에 근거하여 기존의 대중 관여 정책을 강경하게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 역시 미국 중산층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대외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과 함께 중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신냉전-대결 정책에는 반대하지만 비확산과 기후변화 등에서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전략적 경쟁은 강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미국 패권의 대내외적 이익조화의 차원에서 보면, 바이든 정부의 최대 과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대내적으로는 중산층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은 일정하게 견제하는 한편 동맹과의 경제적 연계와 이익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 문제는 과연 이런 해법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고 해도 바이든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미국의 중산층 재건을 위한 제조업 지원과 국산품 우선 조달 등 산업정책은 미국이 비판하는 중국의 산업정책과 얼마나 다른가? 전략적 경쟁-협력 이원론은 트럼프의 신냉전-대결정책이 중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으로 얽혀 있는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중국과의 전면적인 탈동조화(de-coupling)를 압박했다고 비판하지만, 과연 효과적인 반중 혹은 중국 견제 연합(with and for allies and partners)¹¹의 결성을 위해서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제시할 기술적, 경제적 대안은 있는가?

○ 유례없는 도전

-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정책을 주도해오고 있는 캠패일은 최근(12월 3일) 그간 미국 패권 쇠퇴론의 오류 혹은 실패를 지적하며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미국체제 재건의 유용한 수단이 될

¹⁰ 이해정, "단극의 환상과 현실: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진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6권 제1호(2020), pp. 37-79.

¹¹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rising-to-the-china-challenge>

수 있다는 희망(적 전망)을 피력했는데¹², 과연 이번에도 미국은 패권쇠퇴론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 60-70년대 베트남전쟁, 달러위기, 인종문제와 정치위기의 해법은 브레턴우즈 II (금태환 폐기와 달러의 기축통화지위 유지, 강화), 베트남 전쟁 종언, Nixon-Kissinger의 '현실주의' 외교(소련 견제를 위한 중국과의 화해), War Powers Act, Church Committee 등을 통한 개입주의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대내적 법치의 강화였는데, 현재 미국 상황에서 패권 엘리트들은 개입주의를 얼마나 포기했는가? 정치권은 개혁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 80년대 중반 이후 케네디의 과대팽창론, 일본 부상-위협론, 냉전의 종언은 사실 미국체제의 패배와 일본-독일 승리라는 쇠퇴론이 불식된 주요한 이유는 소련체제의 종식, 일본 거품경제의 붕괴, 독일 통일-유럽 연합 기획의 실험 등으로 미국의 경쟁세력이 사라진 것인데, 현재의 경쟁세력인 중국은 과거의 소련, 독일, 일본과는 너무도 다르지 않은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70년대 이래 미국체제 재건의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쇠퇴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 현재 미국의 위기는, 바이든도 인정하는 것처럼 스페인 독감 이래 100여 년 만의 최대 보건 위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60년대 이래 최악의 인종위기, 그리고 전례 없는 기후변화의 도전에 더하여, 19세기 내전 이래 최악의 정치적 분열의 복합적, 역사적 위기¹³
- 19세기 후반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진보주의 시대의 개혁으로 극복했다는 역사도 소환되고 있지만¹⁴, 당시의 개혁은 인종주의적이었고 미국의 부상은 제국주의적
- 대공황의 극복도 대내적 개혁은 철저히 인종주의에 기반한 것이었고, 경제회복은 결국은 2차대전에 의한 것이었는데, 구조적 인종주의의 개혁 없이 미국이 존경받을 수 있을지 2차대전과 같은 '신의 선물(Godsend)'을 기대할 수 있을지?
- 리더십은 followership의 함수이기도 해서,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파 혹은 중국과의 비교에서 상대적 충성파가 전 지구적으로 유지, 강화된다면 미국의 리더십은 바이든의 동맹과 다주주의 등등의 구호 아래 일정하게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 민주주의의 재건과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리더십의 장기지속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미국의 '리더십'은 '불량 최강대국(Rogue Superpower)'¹⁵에 가까울 것

2. 무엇을 할 것인가?

¹² Kurt M. Campbell and Rush Doshi, "The China Challenge Can Help America Avert Decline: Why Competition Could Prove Declinist Wrong Again," Foreign Affairs (December 3, 202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0-12-03/china-challenge-can-help-america-avert-decline>

¹³ Suzanne Mettler and Lieberman, Robert C. "The Fragile Republic: American Democracy Has Never Faced So Many Threats All at Once," Foreign Affairs 99-5(2020), 182-195

¹⁴ Robert D. Putnam and Shynln Garrett, *The Upswing: How America Came Together a Century Ago and How We Can Do It Again* (2020).

¹⁵ Michael Beckley, "Rogue Superpower: Why This Could Be an Illiberal American Century," Foreign Affairs 99-6(2020), 73-87.

- 관건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대안 마련이다. 한때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첨병이었던 IMF는 지난 10월의 연례총회를 계기로 '새로운 브레턴우즈의 순간'이라는 기치 아래 경제적 불평등과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과 그를 위한 국제경제 거버넌스의 창출을 주창하고 있다¹⁶.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 대선이 실시되고 트럼프의 불복으로 정권교체가 지체되는 동안, 중국은 '쌍순환'과 기술자립, 군사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계획을 확정하고 RCEP를 타결하고 CPTPP의 참여 가능성까지 시사하였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중산층과 전 세계의 중산층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요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고 적어도 지역에서 중국의 역할과 지위를 일정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민주주의 수사와 군사력을 통한 대중 압박에 집중될 것이고 미중 간 협력의 공간은 쉽게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 공공재(public goods)는 고사하고 동맹들을 위한 클럽재(club goods)를 제공할 미국의 의지와 능력이 의심스런 상황에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전면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한국 외교의 선택지가 아니다. 새로운 전략 환경에서 공동의 문제, 이익, 가치에 따라 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한국의 동맹 정책이어야 한다.¹⁷

¹⁶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10/15/sp101520-a-new-bretton-woods-moment>

¹⁷ 이해정(2020), 11.

III. 제 2세션 <동아시아 평화: 도전과 과제>

동아시아 평화: 도전과 과제 -- 2020, 그리고 이후

박명림(연세대학교)

*** 21세기 전통 동아시아 평화의 3대요체;

미중협조체제, 일본평화헌법, 북한 비핵화

평화에 대한 기존의 정통적 의식과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의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 요체는 분명하다. 그것은 세 차원이다.

첫째는 세계차원, 즉 미·중관계다. 최선은 미중협조체제의 지속이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동시에 미중 수교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주요 전쟁이 사라졌음을 유념할 때, 게다가 둘 모두 경성제국이 아닌 연성제국이기에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전쟁과 무력충돌로 나아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없다. 투키디데스의 함정(Graham Allison) 명제는 오류로 보인다.

둘째는 동북아 차원이다. 중일 영토갈등, 일본의 평화헌법 유지, 일본의 과거사·인권문제의 보편적 해결이 중요하다.

셋째는 한반도 차원으로서 북한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남북평화공존이다.

*** 평화의 범주의 확장과 전환 – 2020의 “대감염 전환”(Pandemic Turn) 의미:

인간평화·국제평화·세계평화에서 행성평화·생태평화·지구평화로

전지구적 대감염병 코로나19로 대표되는 현재의 세계 상황은 인류사적 문명사적 차원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특히 평화의 문제에서 그러함. 기존의 “인간요인”에 의한 인간피해와 재앙에서 “인간이외의 요인”에 의한 그것들로 급속하게 전이. 기후변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감염질병, 식량위기, 공기오염과 같은 요인이 내전, 전쟁, 침략, 종족 학살과 같은 요인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임.

코넨리(William E. Connolly)에 따르면 ‘행성적인 것’(the planetary. *Facing the Planetary: Entangled Humanism and the Politics of Swarming*)들의 중요성이 결정적으로 대두. 평화의 가치와 목표 역시 인간 내부의 인간평화, 국제평화, 세계평화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지구평화, 생태평화, 행성평화(planetary peace)로 실질적 가치적으로 모두 확산, 전환, 병진.

앞으로 인간적 요인들과 행성적 요인들 사이의 장기적인 길항, 또는 후자의 전자에의 규정력이, 기존의 전자 사이의 요인들만으로 인한 세계질서 주조양태를 크게 바꾸어놓을 것임이 분명. 이제 국제질서·국제정치는 (세계평화에 대해 임마누엘 칸트가 놀랍도록 일찍이 암시한대로) 행성질서·행성정치의 일부가 되거나, 또는 행성질서·행성정치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 속에 전개될 것임. 가장 근본적인 인간조건은 곧 지구라는 행성이기 때문임. (한나 아렌트)

*** “행성적 전환”(planetary turn/transformation)과 동아시아 평화

동아시아 평화 역시 그러한 행성적 지구적 요인이 추동하는 문명사적 전환의 자장 아래에 놓여있음. 이 점은 우선 과연 오늘의 중국의 제국으로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와 직결됨. 발표자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탈냉전 이후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인정하더라도, 코로나19로 초래된 현재의 조건과 상황에서 위의 점들을 먼저 전제하고자 함.

*** 중국의 방역과 경제 성공 對 국제적 신뢰·투명성의 퍼스펙티브 문제

첫째는 중국의 경제와 방역의 성공이 과연 국제적 패권과 영향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임. 발표자는 이 문제를 거꾸로 보고 있음. 즉 작게는 IHR 위반을 포함해 금번에 대감염병의 발생 보고 확산 대처 협력의 문제에서 문명세계의 신뢰와 지지를 잃음으로서 중국으로서는 오히려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 이 점은 단순히 미중 무역갈등이나 미국-WHO-중국 사이의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님. 그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차원의 인류공동체의 신뢰와 연대의 기반 문제를 말함. 그점에서 코로나19와 화웨이 문제는 각각 '방역'과 '기술' 영역에서 매우 유사한 발생과 궤적을 밟아가고 있음. 인류평화와 협력의 전제인 투명성, 정보, 신뢰, 개방성, 공개성, 연대성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임. 이를테면 후자-화웨이 문제를 표준경쟁이나 무역-기술갈등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넘어, 인권 및 정보, 프라이버시, 보안/안전/안보(security)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대립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음.

*** 유럽과 동아시아, 서구와 중국: 외부 수용과 내부 수정의 능력과 문명평화

두 번째는 장기적-거시적인 역사적 시간의 문제다. 서구중심주의를 배제한다면, 발표자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막스 베버(『사회경제사』), 칼 야스퍼스(『역사의 기원과 목표』), 그리고 페르낭 브로델(『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세계역사 지평에서의 해석 -- 세계보편과 서구의 자기반성 -- 을 수용하고 따른다. 중국을 포함해 서구 이외의 문명이 서구에 준 충격은 단기적인 파급과 장기적인 역전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요컨대 서구의 외부수용, 자기부정, 자기갱생, 회복탄력성, 격변, 역전의 거시 반응능력을 말함.

이들의 통찰을 따를 때 민주주의, 기독교, 종이, (인도-아라비아) 숫자, 인쇄술, 화약, 대포 모두 거의 유사한, 또는 동일한 궤적을 밟아옴. 근대, 과학, 이성, 민주주의, 기술, 자본주의, 만국공법질서를 서구가 주도한 현실을 예리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음. 우리는 세계사에서 황화(黃禍, Yellow Peril)의 문명사적 인류사적 충격과 역할을 고려할 때 오늘의 중국의 공세와 거만과 위협이 수세기 후 끝내 중화(中禍, Chinese Peril)로 귀결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는 편임.

*** 국제 보편규범과 중국의 적응과 초월문제

세 번째는 과연 향후 새로이 대두될 기후, 생태, 환경 분야에서 부과될 보편적 전지구적 다자적 제약과 규제를 중국이 쉽게 극복할 수 있느냐임. 이 문제는 중국으로서는 새로운 문턱일 뿐만 아니라 성공의 대가이기 때문임. 중국이 기존의 발전도상국 위치일 때와, 향후 주도국가로 부상하려 할 때에 과연 지금까지와 같은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으로 역할할 때 부여받은 일정

한 기회와 공간, 너그러운 자비와 특혜를 계속 부여받을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이 점은 꼭 트럼프나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중국이 치러야 할, 중심으로의 진입의 국제적 장벽이었는지 모른다. 발표자는 후자로 해석함. 왜냐하면 이 문제는 유럽, 바이든(Joe Biden)의 미국, 호주라고 해서 트럼프와 근본적으로 다르기는 어렵기 때문임.

게다가 내부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내부적으로는 중국이 민주주의와 복수정당제 없이 과연 일당체제와 시장경제의 장기 병행이라는 예외주의를 통해 중진국 함정 및 중산층 돌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포함하여.

*** 신(新) 천하질서·유교평화(?)와 동아시아 평화

넷째는 과연 오늘날 중국 정부와 중국 학계, 또는 서구 일부의 중국 중심주의가 주목하는 -- 마치 과거 역사해석의 페어뱅크 학파-중국학파를 현재에 재연한 듯한 -- 동아시아의 새로운 천하체계·천하질서(New Chinese World Order. New Tanxia), 유교평화(Confucian Peace) 담론이 과연 현실적이며 가당키나 한 담론이나 하는 점이다.

과거의 중국 중심의 천하체계·천하질서는 무엇보다도 첫째로 서구와의 조우 이전이며, 둘째로 국제 공법질서와 제도가 들어오기 이전의 관념과 규범의 질서 체계였으며, 셋째로 일본·한국·베트남·인도를 포함한 주변국가와 체제들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물질문명, 인권, 기술과 상품수준 등에서 중국보다 더 발전된 체제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 그 국가들은 모두 중국과는 가치와 체제가 다르며, 중국보다는 더 발전해있거나, 또는 서구 지향적이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의 부상을 새로운 천하체제의 등장이라고 보는 것은 오류가 아닐 수 없다.

*** 선례로서의 홍콩문제를 포함한 몇몇 주요 현안들의 경우에 대한 해석

물론 구체적인 현안과 사안들 역시 결코 중국에게 긍정적 호의적이지 않다. 그리고 단순한 미중갈등을 넘어 중국 - 인도 충돌, 중국 - 호주 갈등, 중국 - 한국 긴장, 중국 - 일본 긴장과 같은 요인들은, 역설적으로 중국 요인으로 인해 다자주의에서 과거의 양자주의 및 통상관계(바퀴통 - 바퀴살 사이의 관계. hub-and-spokes)양태를 부활시키고 있음. 신형대국관계, 일대일로, 중국몽으로 대표되는 대국전략에서 최근 RCEP을 포함한 지역전략으로의 중국의 회귀는 과연 주변의 마음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전통적인 신장·위구르문제와 양안관계에 더해 최근 센카쿠 열도(尖閣列島)/타오위다오(釣魚台) 분쟁, 특히 홍콩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결코 보편적 국제규범과 가치를 중시하는 접근이자 행태로 볼 수 없기 때문임. 더더군다나 대국 및 제국/천하로서의 행동체계와는 거리가 멀다. 홍콩문제에 대한 위압적 폭력적 접근 사례는 양안문제 해결 - 타이완 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오래 주장해온 일국 양제가 결코 궁극적인 실질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일종의 선전과 명분이었음을 증명함.

***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중국: 20세기와 현재의 비교

거시적으로 볼 때 중국은 미국과 자유주의 세계의 지지와 협력의 공간 속에 그동안 급속

하게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에 진입. 한국전쟁에서의 충돌을 제외하면 동서조우 시기의 탈락과 모멸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유주의 세계의 협력과 지원을 받음. 소련붕괴 및 제거를 위한 협력. 미중국교정상화 이후, 그리고 탈냉전 세계화 이후의 세계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한 각각 소련견제, 미중협력, 저임금 생산기지, 소비시장, 자본주의 금융체제 및 시장경제확대의 제일의 파트너로 인식 및 대우. 문제는 그 사이 중국이 과연 국제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수용하였느냐는 문제임. 이제 는 단순히 자유주의 국제질서관과 국제체제를 받아들이나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 보편적 가치의 수용 및 책임 여부, 또는 그렇지 않다면 가치와 질서 주도 능력 여하라고 할 수 있음.

덩샤오핑에서 장쩌민을 거쳐 후진타오까지는 비교적 수용적이며 확장적 진취적. 그러나 시진핑 시기 들어 유교, 민족주의 및 공자의 적극적 부활과 함께 뚜렷한 과거회귀적 수축적 공세적 전략을 노골화. 중국 국가이념의 과거회귀는 극적인 성공의 역설. 과거의 확장과 수축의 오랜 반복 역사처럼 중국은 가치와 이념의 “확장국면”을 지나 가치와 이념의 본격적인 “수축국면”으로 진입한듯 보임. 이것이 과거 전통왕조들처럼 국력의 수축으로 연결될지는 아직은 두고봐야함. 따라서 “공자를 불러오면 중국은 망할 것”이라는, 근대 중국과 현대 중국을 열었던 루쉰(魯迅)과 마오쩌둥(毛澤東)의 역설적인 통찰이 더욱 주목되고 있음.

*** 성공의 역설: 동아시아 패러독스.

과거 국내 수준에서 경제발전과 권위주의가 병존하던 국내적 차원의 동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 이제는 경제발전과 국제갈등이 병행하는 제2의 동아시아 패러독스를 노정.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중대한 성공, 또는 실패의 실험장. 역내 경제협력, 무역, 관광, 인적 교류는 세계 최고 수준. 그러나 군비경쟁, 상호 혐오, 민족주의, 영토갈등, 역사갈등 역시 세계 최고 수준. 넘쳐흐르는 효과(spill-over effect)는 실종? 한국과 일본과 중국, 타이완, 북한 모두 경제, 기술, 군사 부문에서 대부분, 또는 일부에서 각각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 따라서 인방과의 관계가 모두 성공의 역설에 진입.

*** 한반도문제: 세계분할로서의 휴전선=정전선=재분할선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은 동아시아에서 세계 자유진영과 세계 공산진영의 세계분단, 세계 전선, 세계대결, 세계경계의 분할 계선이였다. 물론 두 한국은 그 최전방이자 최전선이였다. 세계의 두 분할선인 유럽의 베를린장벽과 동아시아의 한반도 휴전선의 안쪽이 사회주의 진영이었고, 밖이 자본주의 진영이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붕괴와 냉전해체는 유럽의 베를린 장벽은 붕괴시켰으나, 동아시아의 휴전선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독일은 한국전쟁과 같은 세계시민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였다. 전후 한국의 휴전선은 세계 최대의 병력이. 세계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채,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대치하고 있는 화약고였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전후 전쟁의 재발은 즉각 세계전쟁이었기 때문에, 표면적인 위기와 불안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안정과 대치가 유지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한반도에서 전면 전쟁의 폭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발발과 함께 세계전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준 것은 아니었다.

**** 전후 한반도의 안보체제:** 전후 한반도의 안보체제(security regime)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전체제(armistice regime)이고, 다른 하나는 핵체제(nuclear regime)이다. 둘 모두 북한의 전

쟁시작과 핵개발로 초래된 군사체제다. 그런데 둘 모두 글로벌 안보체제와 안보질서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다.

어떻게 넘을 것인가? 둘 다 한국안보=한반도평화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안보=세계안보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한국전쟁의 극복 방식을 평화시기에 안고 넘어 준용·원용·대체하면 된다. 거기에 길이 있다. 한국의 당사자주의와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다자주의와 보편주의를 통해 세계와 함께 가야 한다. 자유, 평등, 민주주의, 평화의 가치를 함께 할 때 세계와 함께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제 및 동아시아 평화·안보문제로서의 북한의 핵문제

북한핵문제는 이제 완전히 국제 안보평화 문제임. 따라서 한반도문제-남북문제는 — 경제협력과 남북회담을 포함해 — 사실상 국제 안보-평화 문제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게 됨. 남북문제나 한반도 평화문제의 脫민족화, 脫남북문제와, 脫한반도화를 주도한 것은 역설적으로 강한 민족주의적 배외주의를 고수해온 북한의 핵개발 전략이었음.

북한은 과거의 핵개발 단계를 지나 지금은 핵개발을 완성한 이후 핵능력의 고도화와 ICBM의 결합을 추구하는 이른바 “전략국가” “핵국가”를 지향. 헌법에도 핵무기를 삽입. 단순한 ‘보검’(state sword)을 지나 ‘만년 보검’ 담론이 정권 내부를 장악. 외부의 “비핵화=평화” 등식과 완전 반대로 “(영구) 핵무장= 평화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대응은 독자 핵무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제연대를 통하여, 순서대로 ① 비핵화 ② 핵무력화(無力化) ③ 핵 봉쇄 ④ 핵 균형이 거의 유일한 길. 정전체제와 북핵체제()라는 한반도에 실존하는 두 개의 안보체제(security)는 모두 북한의 국제적 군사도발에 의한 것. 즉 세계문제. 따라서 유엔-EU-안보리를 포함한 다자협력과 다자대응이 최선.

체제인정과 경제봉쇄의 결합이 가장 강력한 해법.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한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남북평화공존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의 체제는 확실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강력한 국제제재를 결합하여,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입구를 안출해야한다. 다음으로 가장 결정적인 계기로 체제 인정과 전면 사찰을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이를 테면 미북·북미 대표부의 수도에의 상호교환이 포함된다. 비핵화는 전면 사찰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이다. 끝으로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미국과 북한의 수교를 통한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건인과 제약의 동시 부과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핵평화 및 미북·북미 수교 단계에서는, 남한과 북한은 미·중의 하기(下記) 서명과 함께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항구적인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어간다. 물론 다자평화를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은 불필요하다.

*** 안팎의 두 개의 공화적 평화(republican peace)와 궁극적인 동아시아 평화

안팎의 공화적 평화에 대한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저 놀라운 첫 연결 통찰과 지혜 -- “군주정의 정신은 전쟁과 팽창이다. (그러나) 공화국들의 정신은 평화와 절제다.”(“The spirit of monarchy is war and expansion; the spirit of republics is peace and moderation.”) (『법의 정신』 케임브리지 영문판. p.132) -- 이래, 훗날 매디슨과 칸트의 상세한 철학적 이론적 제도적 정교화를 거쳐 민주공화국 — 마이클 도일이 잘못 해석하고 상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 은 상호간에 거

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이론적 경험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내부의 비례적 민주공화적 갈등해소, 즉 견제와 균형, 공존과 연합과 평화 때문이었다. 평화에 관한한 “안”이 “밖”이었던 것이다. 즉 주지하듯 “공화국의 평화”(peace of the republic)는 “공화국들의 평화”(peace of the republics)의 선제조건이자 전제임. 그러한 점에서 당분간 미국과 일본, 한국과 타이완이 주도하는 무력적 체계적 침략과 평화 파괴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내부 민주화를 통한 연합-안정-민주공화 정도와 외부 공존-평화는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 일본평화헌법의 문제

그럴 때 또하나의 중요한 중요한 요인인 일본평화헌법의 문제는 당분간 평화 위협과 파괴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 즉 개헌없는 무장은 지속할 것. 그러나 일정한 역할과 일정한 제약을 지속할 것. 일본은 당분간 결정적인 평화강화와 평화 파괴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임. 다만 바이든 시대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흐름은 분명해질 것임. 따라서 지소미아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동아시아 및 한반도 평화를 향한 한국의 역할과 과제, 원칙과 방향

향후 국제 평화, 동아시아평화로서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점진적 평화적 보편적 해결의 성공 가능성과 경로는, 문재인 정부와 86세대가 주도해온 기존 방식의 적극적인 혁신과 수정 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바이든 시대에 더욱 필수적이다.

첫째 근대 외교사 및 국제정치사에서 불가능했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지도자 중심 및 하향식(top down) 방식”에 대한 중단 여부다, 평화를 위해 하향식의 ① 국왕외교(royal diplomacy), ② 내각외교(cabinet diplomacy)를 거쳐 상향식의 ③ 국민외교(national diplomacy) - 국가외교(diplomacy of republic)로 진화해온 국제 외교사와 평화사를 유념할 때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둘째 시대착오적이고 비주체적인 “중재자” 인식 및 접근의 “당사자” 문제의식과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전환 여부, 한국은 의심의 여지없는 한반도문제와 북핵문제의 당사자다.

셋째 기존의 양자주의를 넘는 다자주의 및 가치 동맹 문제의식의 복원 여부, 넷째, 민족주의와 통일지향, 남북(南北)주의의 혁명적인 단절과 극복을 통한 국제주의와 평화 목표의 추구,

다섯째, 군사주의(북)와 기능주의(남)를 모두 넘는 정치와 외교 중심적 공간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복원여부. 그러나 운동권 특유의 과거지향적 이념주의와 수단주의를 지속하는 한 이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임.

이 때 결국은 86운동권 세력의 민족주의 인식체계와 접근방법을 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함. 일련의 민족주의와 남북관계·남북주의 중심의 접근법이 갖는 폐쇄성과 反보편성, 국제 고립과 배제의 위험에 시급히 눈을 뜨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과 제재, 남북관계와 인권문제에 관한한 문재인 정부와 86민족주의세대는 위험하게도 “역(逆)할슈타인 원칙”을 드러내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 목표와 정념·정조는 — 액튼 경(Lord Acton)의 강조 이래 수많은 이론가들이 주장하였듯 — 민주주의, 인권, 평화, 공존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대한 반명제와 억압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관제민족주의는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민족주의의 실패의 사후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Benedict Anderson) 결국 안보와 평화의 제일 기축을 국제 다

자주의와 한미동맹으로 삼고, 북핵문제 해결과 경제이익 증진을 위한 지역협력 및 한중관계 증진을 예술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핀란드와 오스트리아와 독일(서독)이다. 만약 RCEP은 참여하면서, TPP나 Quad, 지소미아는 불참, 또는 파기한다면 결코 바른 선택이 아니다. 내부 연립과 연합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증진, 한중-한소관계 개선, 남북관계, 내부 민주화를 결합하였던 노태우와 김대중 시기의 국제 접근을 깊이 학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안보질서 안정을 위한 다자안보 협력 추동: 도전과 과제

박재적(한국외국어대학교)

1. 탑-다운(Top-down) 방식을 통한 효율적 다자 안보협력 추동 실패

- 인·태 지역에서는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함.
 - 정치체제를 상당 수준 통합하고 집단방위체제 및 안보협의체를 구축하고 있는 유럽과 비교해 볼 때 효율적인 다자 안보기구의 부재는 더욱 두드러짐.
- 효율적인 다자안보 협력체를 태동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국내·외에서 있었음.
 - 2008년에 호주 러드 수상은 아시아·태평양공동체(Asia-Pacific Community)를 창설하자고 역설함.
 - 동 구상은 동아시아 역외 국가인 호주가 공동체 형성에 주도권을 갖는 것을 우려한 중국과 일본의 무관심으로 실패
 - 2009년 일본 하토야마 총리는 '우애'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안하여 역내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을 추진함.
 - 하토야마 총리의 제안은 경제보다 안보 이슈를 중요시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
 - 우리는 노태우 정부 시 '동북아 평화협의회 방안', 김영삼 정부 시 '동북아 협력대화', 노무현 정부 시 '평화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상', 이명박 정부 시 '신 아시아외교', 박근혜 정부 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문재인 정부 시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을 제안함.
- 역내에서 효율적인 다자 안보체제를 구동시키는 데 실패한 구조적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첫째, 역내 국가들의 이질적인 정치체제, 사회·경제 체제, 종교 때문에 이들 국가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기 위한 인식의 토대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음.
 - 둘째, 복잡하게 영토분쟁과 역사적 구원이 얽혀있음.
 - 셋째, 다수의 동아시아 국가가 서로 다른 국가를 (잠재적) 적으로 인식함.
 - 넷째, 역내 국가들의 정치적 수준, 군사 역량 및 경제발전 정도가 매우 상이하므로, 동등한 토대에서 그들 간의 수평적인 협력이 형성되고 조정되기 어려움.
- 위와 같은 '구조적(structural)' 한계 외에도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이 역내 다자협력을 상반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이유임.
 -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다자협력의 참여국을 역내 국가로 한정하고 미국의 참여를 배제하고자 함.

- 즉, 중국은 다자영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배타적 동아시아 지역주의(exclusive East Asian regionalism)', '범 아시아 지역주의(Pan-Asian regionalism)', '글로벌 아시아(Global Asia)' 개념 강조
- 아울러 신형대국관계, 신 아시아 안보, 신형국제관계, 신형주변국관계 등의 슬로건을 통해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해 담론적(Rhetorical)으로 도전
- 미국, 일본, 호주는 기존의 '포괄적 아-태 지역주의(Inclusive Asia-Pacific Regionalism)'를 '인도-태평양 지역주의 (Indo-Pacific regionalism)'로 확대 발전시킴.
- 중국은 'Indo-Pacific' 공간개념 미사용
- 중국 외교부장 왕이: 인-태 개념은 "태평양 또는 인도양에 떠 있는 바다 거품 같다(like the sea foam in the Pacific or Indian Ocean)"(2018년)

2. 소다자 안보협력의 중층적 연계를 통한 down-top 방식의 다자 안보체제 구축

- o 역내에 효율적인 다자협력체를 구동시키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다자적 협력 메커니즘을 추동시키고 이의 중층적 연계를 통한 좀 더 다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대안이 주목받고 있음.
 - 소다자 안보협력의 중층적 연계가 다자주의로 발전하게 된다면 이는 동맹과 다자주의가 상호 보완적임을 보여줌.
 - 그러나 만약 소다자주의가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난다면, 다자주의가 동맹의 부수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 대립적인 안보 구도가 지속할 것임.
- o 다양한 조합의 소다자 협력이 중층적으로 연계된다면, 자연스러운 융합과 배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역내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좀 더 다자적인 안보 협력체가 태동할 수 있음.
 -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양자 또는 소다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동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 규모의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 태동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임.
 - 물론 동 과정에서 이른바 '스파게티 접시 효과(spaghetti Bowl effect)'가 나타나 소다자 협력 끼리의 충돌과 분열로 효율적인 다자 안보협력의 구현이 지연될 수도 있음.
 - 그러나 유럽과 달리 다자협력이 지체되고 있는 인-태 지역의 현실에서 소다자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다자협력의 추동은 효과적인 대안임.
 - 이러한 맥락에서 '윌리엄 토우(William Tow)'는 소다자주의는 양자주의와 다자주의가 수렴하는 'convergent security'를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맥락에서 '빅터 차(Victor Cha)'는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 안보협력을 미국주도 네트워크상에서 빈 곳을 메워주는 'patch work'으로 특징 지우고, '료 사하시(Ryo Sahashi)'는 소다자 안보협력을 양자와 다자로 구성되는 삼 단계 중 중간 단계로 규정함.

3. 미국의 접근: 미국 주도 소다자 안보협력 확산

- o 소다자 안보협력은 기존의 밀접한 군사·안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 형성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인-태 지역에서는 안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음.

-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동맹국 및 안보 우호국과의 소다자 '안보 네트워크(security network)' 구축을 지속·확장하고 있음.
 -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기존 문헌에 제시하고 있는 'expansive bilateralism', 'enriched bilateralism', 'strategic Asian triangles', 'contingent trilateralism', 'mini-multilateralism'과 같은 용어는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 동맹 및 '국방협력 협정(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DCA)'이 연계되는 현상을 지칭함.
- o 미국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역내 다자기구를 보안·강화하여 효율적인 다자 안보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다양한 동맹, DCA 등의 연계를 통해 점증적으로 다자안보체제를 태동시키겠다는 '아래로부터 위(down-top)'로의 접근을 취하고 있음.
-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다자 안보협력은 아래와 같음.
 - 미국-일본-호주 삼자전략대화(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TSD)
 - 미국-일본-인도 삼자협력
 - 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안보협력(Quad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Quad)
- o Quad+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플러스 국가로 역외에서는 영국, 프랑스, 역내에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이 언급됨.
- 2020년 10월에 개최된 장관급 쿼드 회의 후에 일본이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는 유럽 일부 국가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명시함.
 - 영국이 브렉시트 탈퇴 결정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협력을 증강하고 있음.
 - 영국은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함께 '5개국 국방협력(Five Powers Defence Arrangement)'의 일원
 - 영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최근 급속히 강화
 - 영국이 군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하여 훈련
 - 프랑스가 인도양 서쪽 끝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서의 해군력 투사에 더해,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안보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프랑스 EEZ의 85%, 병력 8,000명, 160만 인구가 인도-태평양에 위치
 - 프랑스가 군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하여 훈련
 - 프랑스 마크롱(Macron) 대통령이 '파리-델리-캔버라' 축을 제안하였고(2018.5), 인도, 호주, 프랑스가 2020년 9월 9일 제1차 차관급 삼자 대화를 가동함.
 - 인도양 프랑스령 '레위니옹(reunion)', 호주령 '코코스 아일랜드', 인도 '안다만-니코바르 제도'에서 각국이 취합하는 군사정보가 공유되고, 상호 함정의 접근이 용인된다면 광활한 인도양의 상당 부분 통제

미국의 집단 안보 구상: 쿼드의 확장

- o 쿼드를 확장하여 다자안보협력체를 태동시키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미국 국무부 비건 부장관이 쿼드 확장으로 인한 아시아판 나토(NATO)의 출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함(2020.9).

○ 역내 일부 학자는 1941년 영국과 미국이 체결하였던 '대서양 헌장(Atlantic Charter)'처럼, 쿼드 국가가 중심이 되어 항해의 자유, 법의 지배 등 보편적 원칙을 공표하는 '인도-태평양 헌장'을 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음.

- 중국과 아세안의 CoC 협상이 정체되면, '인도-태평양 헌장' 논의가 부상할 가능성이 큼.
- 대서양 헌장이 종전 후 UN 창설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Indo-Pacific Charter 채택은 향후 역내 집단안보체제 구성을 위한 준비로 인식될 것임.

○ 그러나,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로 확장하거나, 쿼드 국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헌장'이 제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음.

- 호주, 인도, 기타 미국의 동맹국과 안보 협력국이 최근 급증하는 중국위협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거나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국지전을 초래하는 경우 이전까지는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안보적 이익 못지않게 고려할 것임.

○ 단, 미국이 다양한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다수의 Quad+를 시도하면서, Quad+를 통한 다자안보체제 구축의 기초 작업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일례로, 2020년 코로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호·인도와 한국·베트남·뉴질랜드가 3월부터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한 화상 회의를 미국 비건 부장관은 Quad+로 지칭함(2020.9).

○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쿼드 플러스' 결성 시, 미국이 비전통안보 의제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부과하여 플러스 대상 국가의 참여 부담을 덜어주려 할 것임.

- 2007년 쿼드 좌초를 경험한 미국이 쿼드를 노골적인 중국 봉쇄의 도구로 운영하기보다는, 쿼드에 4국의 인·태 지역 인프라 투자, 역내 국가의 해양능력 배양을 위한 개별적 기여, 기타 비전통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는 역할을 부여해왔음.
- 역내 경제발전, 개발 격차 해소,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라는 대의명분이 있는 한 중국이 쿼드나 쿼드 플러스를 비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즉, 미국이 단기간에 집단 안보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쿼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쿼드 플러스를 추진한 뒤 이를 연계하는 전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함.

4. 중국의 시각

쿼드 확장에 관한 미국의 명시적 의사 표명 전까지 중국 정부의 반응

○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중국 관영언론을 통해 비난하는 것에 머물고, 정부 차원에서는 구체적 대응을 자제했음.

-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한 중국의 전반적인 무관심(nonchalance)은 중국이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정책에 대해 과하게 반응하여 부작용을 초래했던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기인한 측면도 있음.

○ 쿼드 국가의 인프라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음.

- 중국 외교부 코멘트: “미국이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내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 중국은 미국이 투자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2018년 11월)
- 중국은 BRI 프로젝트로 인해 수원국에 재정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2017년 5월에는 중국 재무부가 30개국의 재무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Guiding Principles on Financing the Development of the Belt and Road’를 작성하기도 하였음.
- 중국 지도자들이 지속해서 ‘고품질과 높은 수준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high quality and high standard infrastructure project)’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일부 EU 국가, 일본, 미국과 제삼국 시장에서의 협력을 시작함.

○ 쿼드 내 일부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를 이완시키는 ‘썬기전략(wedging strategy)’을 사용함.

- 도크람 국경분쟁(2017년) 후 갈완 국경분쟁(2020년) 전까지 인도에 유화적 태도를 견지함.
 - 브라마푸트라 강 상류 지역 수력발전 정보 제공 재개
 - 인도인의 티벳 순방을 위해 다람살라(Nathu La route) 재개방 등
- 일본과 중국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영공-영해 연락 메커니즘(air-sea liaison mechanism)’을 설치하기로 합의함.
- 미국의 인·태 전략 참여에 미온적인 아세안을 고려하여 남중국해에서 공세적 행위를 완화하고, CoC 협의를 지속함.
- 중국과 아세안이 제1회 중국-아세안 해양 군사훈련을 시행함(2018년).

○ 한편, 미국의 인·태 전략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 정부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언론과 학계는 다수의 비판적 분석을 산출하였음.

- 미국의 인·태 전략은 기존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정책과의 연속선에서,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평가함.

쿼드 확장에 관한 미국의 명시적 의사 표명 후 중국 정부의 반응

○ 코로나19 상황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해협 해상에서 공세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 중국이 앞서 언급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장관의 ‘쿼드 확장’과 ‘아시아판 나토’ 언급 후 쿼드와 미국의 인·태 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맹렬히 비난하고 있음.

- 2007년 쿼드 version 1이 출현했을 때도,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비판했었음.
-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중국 왕이 부장은 쿼드를 “거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칭하고,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가 추진된다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2020.10.13.).

미국 인·태 전략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 중국은 미국 주도 소다자 안보협력의 강화와 연계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함.
 - 중국은 최근 십여 년간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세적 군사정책을 펼치는 시기에 동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 안보협력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 안보협력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안보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이라고 비판함.
- 다수의 중국 언론과 학자들은 미국이 인·태 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해도, 미국보다 아래와 같은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중국이 미국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전략적 레버리지 갖추고 있음.
 - 일본 및 아세안과 관계개선
 -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는 등 동남아에서 영향력 축소
 - 중국이 지역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미국보다 더 많은 재정 자원을 갖추고 있음.
 - 미국이 동남아 판 마샬플랜을 추진하기에는 자원 부족
 - 인프라 시장은 zero-sum이 아닌바, 중국은 Quad 국가의 인프라 개발이 BRI를 보충하거나, BRI와 함께한다면 환영
 - 불안정한 인·태 안보환경에서 중국이 움직이는데 적합한 전략 공간이 존재함.
 - 인도가 4국 협력을 Quad라기보다는 3(미·일·호주)+1(인도)로 접근
 - 미국이 Quad를 중국 봉쇄의 도구로 이용하려 하면 Quad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동남아 국가들은 그러한 미국에 대해 지지 유보
 - 아세안 국가는 쿼드가 활성화되면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릴 것 우려
- 중국은 역내 국가와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미국에 대응함.
 -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 칭다오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와 해상협력 증진을 위해 '해상연합-2019' 훈련을 시행함(2019.3.29.-5.4).
 -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 시, 양국은 양국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화웨이가 러시아 전역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함(2019.6.5.).
 - 중국, 러시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 해와 인도양 북부에서 3국 합동 훈련을 실시함(2019.12).
- RIC(러시아, 인도, 중국), BRICS, SCO, CICA 등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소)다자 협의체 강화 및 확대를 통해 중국의 세력을 확대함.
 - 한편, Quad가 유일한 지역 협력체가 아닌바, 중국은 EAS에서 쿼드 4국 모두, ASEAN+3에서 일본, AIIB에서 인도, 호주, BRICS에서 인도와 관계하면서 지역 질서 구축에서 Quad의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함.

5. 대안적 접근: 역내 국가 중심의 소다자 안보협력을 통한 다자 안보협력 추동

- 미국은 미국 주도 소다자 협력 강화와 확산이 효율적 다자 안보협력을 추동하기 위한 초석이라

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중국은 냉전의 산물인 미국 안보 네트워크 강화로 인해 역내 다자 안보협력이 정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국의 이러한 인식차는 인·태 지역을 포괄하는 다자 안보체계가 태동하는 데 있어 핵심적 장애 요인임.

- 위의 두 시각 중 역내 소다자 안보협력이 어느 쪽으로 기능하게 될지는,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과 같이 미·중이 아닌 역내 국가가 주도하는 소다자 안보협력의 전개 양상에 영향을 받음.

○ 최근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역내 국가가 주도하는 소다자 안보협력이 증가하고 있음.

- 역내 국가가 안보 질서 구축과 유지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주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시각에 반해, 비록 양 강대국과 비교하면 그 정도는 현저히 낮을지라도 역내 국가가 안보 질서 구축·유지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점증하고 있음.

○ 경성·연성 권력, 전통·비전통 안보 논의가 방증하는 것처럼 최근 종합국력을 구성하는 요인이 다양하게 상호 연계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역내 국가도 역내 안보 질서 구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또한, 국제관계가 과거와 같이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얽매인 '영합(zero-sum)'의 논리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규범, 지역 정체성 등 비물질적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상황도 점증하고 있다는 점도 역내 국가에는 고무적임.

○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기에 미·중에 비해 약소국인 중견국이 단독으로 역내 안보 질서 구축 및 유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역부족이나, '중견국 연합'을 형성한다면 미·중에 대해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게 됨.

- 미국과 중국이 유지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경합하고 있을 때, 역내 국가 연합체의 행위에 따라 경합하는 안보 네트워크들의 관계가 더 분쟁하게 되거나, 더 협력하게 될 수도 있음.
- 즉, 역내 중견국의 소다자 연합이 미국과 중국의 세력 역학관계에 전면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영향력은 없지만, 미국과 중국이 각각의 네트워크를 운영·유지하는 데 일정 정도의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 권력(positional power)'은 보유하고 있음.
- 역내 국가 간 소다자 협력이 미국과 중국이 각각 유지하는 네트워크의 '빈 곳(empty hole)'을 채우고, 양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한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위상을 인정받게 됨.

○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 속에 역내 국가가 구축하고 있는 (또는 구축하여야 할) 대응체제 중 하나가 역내 국가가 주도하는 소다자 안보협력임.

-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방기'의 우려도 역내 국가들이 다양한 양자, 소다자 안보협력을 추동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임.

○ 역내 국가가 기존의 다자협력체를 통해 종종 강대국을 압박할 수 있으나, 기존의 다자협력체에는 이미 강대국들의 이익이 상당히 투영되어 있는바 역내 국가가 지역 질서 구축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임.

-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안보 의제의 경우는 더욱이 역내 국가가 소다자 그룹 구성을 주도하고, 소다자 틀에서 양 강대국을 엮낼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역내 국가 간 소다자 안보협력은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 상의 'spoke' 국가 간 형성되는 경우가 다수임.
- 일본, 호주, 인도가 일본·호주와 일본·인도의 양자 관계 증진에 기반을 두고 2015년부터 차관급 일본·호주·인도 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있음.
 - 환인도양연합(IORA)의 틀에서 호주·인도·인도네시아 전략대화가 태동하여,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Bogor에서 첫 번째 고위급 관료 대화를 개최함.
 - 2018년 9월 캔버라에서 2차 고위급 관료 대화 개최
 - 2013년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GGGI)에서 한국이 송도 사무소를 유치하는데 한국·인도네시아·호주(Korea, Indonesia, Australia, KIA)가 협력하였으나, 그 후 KIA 삼자 안보협력 논의가 정체되었다가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주목할 것은 Quad 국가인 인도, 호주, 일본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등 역내 국가와 안보협력을 증진 중이고 이러한 안보협력이 미국 주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추동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산물로 역내 국가가 주도하는 소다자 협력이 점증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주요 역내 국가는 역내 국가가 중심이 되는 자생적인 소다자 안보협력을 촉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중국이 참여하는 소다자 안보협력에도 필요하면 참여하는 균형감도 유지해야 함.
 - 때에 따라서는 중국도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량 국가'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함.
- 결국,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의 핵심 노드인 일본, 호주, 인도 등이 동 네트워크상에서 위상을 확보해가고, 그 결과 자율성을 확보해간다면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가 지나치게 미·중 대립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게 됨.
- 나아가, 메콩강 협력, 해적퇴치, 해양정보 공유 등을 위해 아세안에서 태동하고 있는 자생적인 (소)다자 협력과 연계된다면, 미·중 전략적 경합에 좀 더 자유로운 다자안보 협력을 구동할 수 있는 초석이 됨.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신남방정책 하 아세안, 인도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와의 소다자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함.
- 일본과 호주가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의 중심 노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양국의 안보협력도 급증하고 있음.
 - 일본과 호주가 2020년 11월 Reciprocal Access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양국의 안보협력이 더욱 촉진되고,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의 북방축과 남방축이 더욱 긴밀히 연결

-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 상에서 일본과 호주의 위상이 강화된다면, 동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미·일동맹과 한·일동맹의 위계가 뚜렷해 질 것임.
- 이와 더불어 일본과 호주가 역내 국가 중심의 소다자 안보협력을 통한 다자 안보협력 구축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면, 역내 다자 안보협력에서도 우리가 양국에 뒤처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미래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을까?

조영남(서울대학교)

○ 최근의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의 국내 조건과 상황을 검토

1.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¹⁸

⇒ 국가 통치 체제와 통치 능력의 문제

□ ‘초기 대응 실패와 최종 통제 성공’

○ ‘초기 대응 실패’: 2019년 12월 중순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약 40일

① 돌발성 감염병 조기 경보체제(warning system) 미(未) 작동: 2019년 12월 10일 최초 내부 보고(기층 정부)와 12월 31일 대외 발표(우한시 정부)

② 역학 조사 실패와 미온적 대응: 2019년 12월 31일 제1차, 2020년 1월 8일 제2차, 1월 18일 제3차 중앙 역학 조사팀 조사와 중앙 정부의 2020년 1월 20일 전면 대응 방침 결정

○ ‘최종 통제 성공’: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약 40일

①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체 봉쇄: 2020년 1월 22일부터 76일 동안 우한시(1,100만 명) 전면 봉쇄와 후베이성(5,700만 명) 15개 도시 부분 봉쇄

② 국내 발생 감염자 “0” 기록: 2020년 3월 19일(해외 감염자 계속 유입)

③ 산발적 감염 사례(랴오닝성 등) 있지만 안정적인 통제 성공

□ 중국의 국가 통치 능력 과시

○ ‘위기의 패러독스’: 개혁기 10년 주기 위기와 새로운 도약

① 문화대혁명(1966-76년)의 위기 이후 1978년 개혁 개방 시작

② 1989년 톈안먼 사건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추진: 전면적 개혁 개방

③ 1997-98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지역 강대국 부상

④ 2007-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부상

⑤ 2019년 코로나19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가속화

¹⁸ 조영남, 「중국은 왜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 『한국과 국제정치』 36권 2호(2020년 여름), pp. 105-135; 조영남,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분석: 중앙의 지도체계와 선전 활동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4권 2호(2020년 여름), pp. 7-44; 조영남, 「중국은 어떻게 코로나19의 통제에 성공했나?: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활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9권 3호(2020년 가을), pp. 107-138.

- 정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국가건설(state-building) 우선 전략의 효과: 단순히 공산당 일당제(권위주의 체제)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 아님

- ① '일상 시기'와 '비상 시기'의 다른 정책 결정 및 집행 체계 구축과 운영
- ② 중앙에서 기층까지 일사불란한 지휘 체제 구축과 자원 총동원
- ③ ICT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회 통치 체계(governing system) 구축과 활용
- ④ 언론 및 시민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국민의 정권 지지 유도

2. '과두제의 딜레마'와 시진핑의 '일인체제' 형성?¹⁹

⇒ 중국 엘리트 정치의 안정성 문제

□ '과두제의 딜레마':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아킬레스건

- 두 가지 문제의 동시 해결 어려움

- ① 통치 엘리트 간의 평등한 권력 분배: 과두제 유지 위한 선결 조건

→ 문제: 정책 결정의 비효율성과 정책 집행의 비효과성

사례> 베트남의 집단지도 체제, 중국 후진타오 시기의 집단지도 체제

- ② 특정 지도자로의 권력 집중: 정책 결정 및 집행 문제 해결 위한 조건

→ 문제: 과두제의 붕괴와 일인체제의 등장

사례> 소련 스탈린 일인체제, 중국 마오쩌둥 일인체제

- 시진핑 시기 엘리트 정치의 변화

- ① 후진타오 시기의 개혁 정체에 따른 사회문제 확산

- ② 제4세대(후진타오)에서 제5세대(시진핑) 지도자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이상 현상' 발생: 일부 통치 엘리트의 반발과 저항(보시라이, 저우융캉, 링지화 등)

- ③ 시진핑 정부의 출범과 '비상시기' 대응 방식 추진

- 공산당 중앙의 권력 강화와 총서기로의 권한 집중
- 강력한 정풍운동(rectification campaign)과 부패 척결 운동 추진
- 시진핑 개인숭배 강화와 '감시 국가(surveillance state)'의 등장

□ 시진핑 '일인체제'의 등장과 중국 부상의 좌절?

- '정책 실패'의 가능성 제기: 마오쩌둥 일인체제의 '부정적 기억'

- ① 계속된 정치 운동과 민심 이반 심화: 대약진운동(1958-60년)과 문화대혁명(1966-76년) → 마오쩌둥 사후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 약화 → 개혁 개방 추진

- ② 권력투쟁의 악화와 통치 엘리트의 분열 심화: 후계자의 숙청(류샤오치, 린바오, 왕홍원), 파벌

¹⁹ 조영남, 『중국의 엘리트 정치: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서울: 민음사, 2019).

대립과 투쟁, 군의 정치개입 등

○ 시진핑 시기의 '불길한 징조들'

- ① 시진핑의 '감투(title) 수집': 기본 감투(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 주석) 외에 10여 개의 영도소조/위원회의 감투
- ② 인민해방군(PLA)의 전면적 개혁 추진(2016년): 중앙군위 주석 연임 확실시
- ③ 공산당 19차 당대회(2017년): 차기 후계자(6세대 지도자) 미 지정 → 시진핑의 3연임 의심
- ④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2018년)에서의 <헌법> 개정: 국가 주석 연임 제한 규정 폐지와 왕치산의 국가 부주석 취임 → 시진핑의 3연임 확실시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공작 조례」 발표(2020.9): 총서기의 권한 문제²⁰

- ①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소집(召集)': 회의 의제 '확정'
- ② 중앙 서기처 업무 '주재(主持)'

○ 「공작 조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 제기

- ① 이전 규칙(1987년과 2002년 제정)의 일부 내용 공개: 총서기 권한을 새롭게 강화한 내용은 없음(장쩌민, 후진타오 시기에도 실행되었던 것)
☞ 정치국/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소집': 회의 의제 확정, 회의 주재, 회의 결과 전달과 공포
- ② 시진핑 권력의 한계 표출
☞ 공산당 주석 직위의 부활 실패
☞ 공산당 총서기에게 '최종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음

<참고>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최종 결정권' 보장

- ① 마오쩌둥: 1943년 정치국 확대회의의 공식 결정
→ 공산당 7차 당대회(1945년):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죽을 때까지 행사
- ② 덩샤오핑: 1987년 중앙위원회의 비밀 결정
→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 '평당원 신분'으로 보수파 주도의 당 노선 변경 추진

3. 내수 중심과 혁신 추동 발전 전략

⇒ 중국의 중장기 사회·경제 발전 계획과 외교 방침

□ 「국민 경제 사회 발전 14차 5개년(2021-25년) 계획(規劃)과 2035년 장기 목표 건의」²¹

²⁰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工作條例」, <人民網> 2020. 10. 13,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2020년 10월 13일); 蔡文軒, 「中共發布〈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工作條例〉評析」, 『展望與探索』 18卷 11期(2020년 11월), pp. 9-14.

²¹ 현상백 외,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권 29호(2020년 12월 2일); 「中共中央關於指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規劃和2035年遠景目標的建議」, <人

◦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2020.10) 통과

◦ 공산당 18차(2012년) 및 19차 당대회(2017년) 결정의 연속: '3단계' 전략

- ① 1단계(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 ② 2단계(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현'
- ③ 3단계(2049년):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強國) 건설'

◦ 1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 (1) 혁신(創新) 추동 발전 견지와 발전 우세 구축: 국가 전략 기술 역량 강화, 기업 기술 혁신 능력 제고, 인재 혁신 능력 향상, 과학기술 혁신 기제 개선
- (2) 현대적인 산업체계 발전 가속화와 경제구조 고도화 추진: 제조(製造) 강국, 질량(質量, quality)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강국 건설
- (3) 강대한 국내시장 형성과 새로운 발전 국면 구축: 내수(內需) 확대가 전략 기점 → '국내 대순환' 발전과 '국내 및 국제 쌍순환(雙循環)' 상호 촉진 추진, 전면적인 소비 촉진, 투자 공간 확대
- (4) 전면적 개혁 심화와 시장경제 체계 수준 제고
- (5) 농업 및 농촌 발전 지속과 전면적 향촌진흥 추진
- (6) 국토 공간 배치 개선과 지역협조발전 및 신형 도시화 추진
- (7) 문화사업 및 문화산업의 번영 발전과 국가 문화 소프트 파워 제고
- (8) 녹색 발전 추동과 사람-자연 조화 공생 추진: 녹색 저탄소 발전 가속화
- (9)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실행과 협력 원원의 신국면 개척: '일대일로' 건설, 세계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 적극 참여
- (10) 인민 생활 개선과 사회건설 수준 제고
- (11) 발전 및 안보(安全) 동시 고려와 높은 수준의 '평안(平安) 중국' 건설
- (12) 국방 및 군 현대화 가속과 부국(富國)-강군(強軍) 상호 통일 실현: '2027년建军 백년 분투 목표' 실현

◦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실현의 위한 방침

- ① 공산당 중앙의 통일적인 영도 강화
- ② 사회주의 정치 건설 추진
- ③ 홍콩 및 마카오의 장기 번영과 안정 확보
- ④ 중국-대만 관계의 평화 발전 및 조국 통일 추진
- ⑤ 양호한 외부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외교: '평화·발전·협력·원원의 깃발', '독립 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 '신형 국제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 건립

□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외교 방침²²

○ 국제 정세 분석

- ① '백 년 동안 없었던 대대적 국면 변화(大變局)': '세계 다극화, 국제관계 민주화, 국제 공평 정의 수호'의 중국 주장이 국제 사회의 환영과 긍정적 평가 받음
- ② 세계 경제의 어려움과 신발전동력 형성: 중국은 세계 경제 회복의 원동력
- ③ 국제체계의 새로운 도전과 국제 협력의 필요성 증대: 중국은 '인류 운명공동체' 건립 추진으로 '책임지는 대국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수립
- ④ 국제 안보의 위험성 증가와 각국 정치 사회의 새로운 시험 직면: 중국은 '신안보관(新安全觀)'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더욱 기여
- ⑤ 이데올로기 부각: 일부 국가의 국내 모순 전환 위한 이데올로기 대립 조장, 인권·종교 구실로 한 타국 공격 → 중국 사회주의 제도가 더욱 개선되고 국가 거버넌스 체계 및 능력의 현대화가 지속되면서 국제적 영향력 및 호소력(매력) 증가

○ 중국의 정세 판단과 외교 방침

- ① 판단: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후진타오), '평화와 발전이 시대 주제'(덩샤오핑)
- ② 방침
 - '독립 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 견지하여 '신형 국제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 건립
 - 지구전(持久戰)의 각도에서 '국내 대순환'을 중심(主體)으로 하고 '국내 및 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신국면 건립에 기여 등

○ 세부 외교 정책

- ① '독립 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 견지와 '인류 운명공동체' 건립 추동: 상호존중, 공평 정의, 합작 윈윈의 '신형 국제관계' 설립 추동
- ② 전 세계 동반자관계 발전과 전방위 외교 국면 개척: '주변국과 대국(大國)을 중점으로 삼고, 개도국을 기초로 삼으며, 다자주의를 중요한 무대로 하는 외교' 방침 견지, '안정적 대국관계 틀(框架)' 수립, '주변국 관계 심화' 추진
- ③ 협력 윈윈의 개방체계 건설과 경제발전 및 세계 공동발전 촉진: '일대일로' 등
- ④ 다자주의 견지와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개혁 및 건설 참여
- ⑤ 주권·안전·발전 이익(즉 핵심이익·인용자) 수호와 국가 발전 및 민족 부흥에 기여
 - '종합적(總體的) 국가안보관' 견지
 - '국가 정권 안전'과 '제도 안전' 수호: 공산당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 보위
 - ☞ '주권 수호':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홍콩·신장·티베트 등에 반중(反中) 세력 개입 반대, 외국 세력의 중국 내정 간섭 반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이익 수호 < 끝 >

²² 楊潔篪, 「積極營造良好外部環境」, <人民網> 2020. 11. 30,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2020년 12월 1일).



동아시아평화회의

